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12. 2.(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시) 배포 2025. 12. 1.(월) 11:00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관광 거점 만든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발표
- 우수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국내 최초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여자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2030년까지 방문객 1,000만 명 달성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 (해양에 지정된 보호구역) 총 9,191㎢, 우리나라 관할해역 대비 2.09% 규모(2025. 11. 기준)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보호구역 관광객 추이 : (2020) 210만 명 → (2021) 233만 명 → (2022) 279만 명
** 호미반도 예비타당성 조사(2024. 11.~), 여자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20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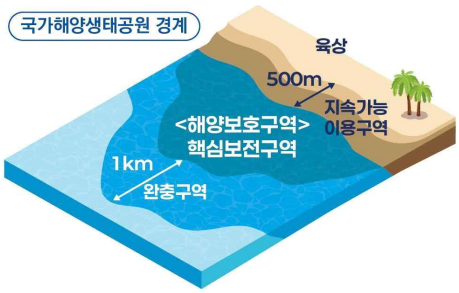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신설 (2022. 12.)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였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이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며,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인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육상 500m)으로 구분하고,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 (완충구역)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해역관리 시행
** (지속가능이용구역) 관찰시설, 보전관, 학습원 등 시설 설치

해양수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과학적 관리·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호체계 마련,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할 해양관측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18→26개소)하고 전용 조사선,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관리·조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훼손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핵심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별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관측(모니터링)단을 육성하여 '참여형 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친환경소재 사용·탄소중립 실현 등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이용 환경 조성

해양자원의 이용은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기치 아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목재·야자매트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조성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울러, '범용(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하며, 제품,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성별,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원 내 블루카본* 서식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공원 운영 모델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방문객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

▣ 정부·지자체·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며 상생하는 구조 마련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 생태공원은 지자체의 주관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는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를 통해 공원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원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판로 확대, 지역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원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은 국민과 함께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이광석 (044-200-5611)

* 지면상 관계부처 담당자는 생략했으며, 해양생태과 문의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요약)

Ⅰ 추진 배경

□ 우수 해양생태계의 합리적 이용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추진

○ (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규제 중심**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운영 중이나 활용에 대한 **국민*·지자체**의 수요** 지속 증가

* 보호구역 관광객 추이 : ('20) 210만명 → ('21) 233만명 → ('22) 279만명

** 가로림만 타재('23.7.~'24.7.), 호미반도 예타('24.11.~), 여자만 예타 대상 사업('25.11.)

○ (국내·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로 **보전**과 **이용**의 조화 추구

- (국외) 국제기구(UN)는 생태계의 **보전**과 동시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EU는 **와덴해생태관광지**, 호주는 **대보초해양공원** 운영

- (국내) 평균 면적 약 300㎢의 대규모 **국립공원**, 2개의 **국가정원**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

> ⇨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법령 개정('22.12.) 이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지정·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 필요**

Ⅱ 국가해양생태공원 개요

○ (개념)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해양공원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보전과 활용이 공존**하는 **복합공간**

- (보전·활용)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적 관리**를 통해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

- (복합공간)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과 인식증진**, **국민 참여**, **이용**, **주민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

○ (지정 방향)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한 구역부터 지정 후 **단계적 확대**, 육상권역 포함 **광역화 지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상생도모

Ⅲ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안)

○ (지정 근거) 「해양생태계법」 제43조의 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①항

○ (지정 수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24.10~1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희망 수요 제출 지역(10개소)

부산	인천	충남		경북		전남			강원
에코 블루마린	인천	가로림만	보령갯벌	호미반도	울릉도	여자만 (순천·보성)	여자만 (여수·고흥)	신안·무안	화진포

○ (공원 지정)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4개소를 지정, 효과 검증 후 확대

- (정책방향) 사업화가 진행 중이며 보전 가치가 높은 4개소(가로림만, 신안·무안, 여자만, 호미반도)는 우선 지정하고 6개소는 '예정구역*'으로 관리, 단계별 확대

* 금회 지정 대상은 아니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업계획 보완, 보전관리 노력을 유도, 추후 지정 가능한 곳

지정구역 및 예정구역

- (지정구역)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①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지역(②신안·무안 및 ③여자만), 해양보호생물(잘피류 등) 다수 서식 지역(④호미반도)

Ⅳ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

비전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 국가해양생태공원		
목표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기반 구축
	2030년까지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 지정·운영	2030년까지 방문객 연간 1,000만명	2028년까지 「해양생태계법」 개정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1.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① 공원 구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②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③ 자율형·참여형 관리
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①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 ②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 인식증진 ③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구축
3.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	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③ 관리제도 고도화

전략 1.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목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협력적 운영·관리 기반 구축**

◈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관측시설(육·해상) 설치 : ('25) 18개 → ('30) 26개소**
◈ **국가해양생태공원 시민모니터링단 양성 : ('25) - 명 → ('30) 40명**

1 공원 구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 (**관측강화**) 해양환경 관측시설을 공원 구역 내로 확대해 **상시관측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강화 및 관측정보 대국민 공개

- (**현황·계획**) 현재 18개(육상4·해상14) → '30년 26개(공원별 육·해상 각 1개)

○ (**조사·연구**) 공원 내 **조사·관찰 체계 구축**과 **광역·장기 생태연구** 추진

- (**조사체계**) 주요 종에 대한 실태 및 위협요인 **정기조사**(연 2회)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공원 지정 후 기본계획·기본설계 시 의무 도입 추진
- (**정밀·장기**) **전용 조사선**(3척 우선)·**드론 활용**, **수중드론·무인선박**으로 광역 모니터링·LTER(Long-Term Ecological Research) 연구 추진

2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 (**서식지 복원**) 훼손된 갯벌·모래톱 등 **서식지 복원**을 통해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 공원 조성 시 서식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 선 시행

- (**연계복원**) 갯벌복원사업·바다숲 조성과 연계하여 **서식지 연결성 강화**

○ (**해양생물 보호**) 보호·증식 위한 **핵심 서식지 조사** 및 **맞춤형 관리**

- (**생활사 규명**) 물범·조류·잘피류 등 **해양보호 생물 특성 기반**을 고려한 **핵심서식지 조사**, **보호구역 설정 및 감시** 추진
- (**복원기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활용한 **구조·치료**와 **종복원 기술개발** 및 인공 증식된 개체의 **자연방류**, **사후 모니터링** 시행

3 자율형·참여형 관리

○ (**자율운영**) **해역 특성을 반영**한 **용도구역제 도입**으로 보호구역 관리 고도화 * 행위 제한을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자율용도구역제' 도입 검토

- (**규제 개선**) 보전지구부터 다중이용지구까지 단계적 활용기준 마련

○ (**민간 참여**)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으로 **해양생태계 보전·활용**과 **블루카본 증진**에 **민간 참여 촉진**

- (**PES 도입**) 민간-정부(지자체) 간 **생태계 보전 계약**과 그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으로 참여 유도 *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 (**시민참여**) 공원별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모니터링단 양성**

전략 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증신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 **국가해양생태공원 탄소중립형 시설 구축 : ('25) - 개 → ('30) 5개소**

◈ **인식증진을 위한 지역 브랜딩(Branding) 전략화 : ('25) - 개 → ('30) 4개소**

1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

○ (**자연친화**) 자연소재 기반 탐방·전망시설 조성으로 **환경훼손 최소화**

- (**친환경재료**) 목재·야자매트 등을 활용해 공원 내 **원형보전 실현, 자연친화 설치기준**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확보

○ (**이용 편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하여 **모든 방문객의 이용성** 보장

○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형 시설운영**과 **그린리모델링** 확대

- (**에너지 절감**) 태양광·풍력 등을 도입해 방문시설 **탄소저감** 효과 제고, **블루카본 서식지** 조성 및 **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

2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 인식증진

○ (**시설계획**) 보전원·학습원 중심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태 교육 강화 * (내부) 전시·체험·관람, (외부) 탐방로, 정원, 탐방선, 탐조 시설

- (**내·외부 연계**) **전시체험과 탐방시설을 연계**해 공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관람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교육·홍보**) **공원의 날 운영**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해 참여 확대

- (**수요 대응**) **세대별·목적별**(치유·레저·휴양 등) 방문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맞춤홍보**) 뉴미디어 기반한 **VPR활용,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공원특성을 표출**할 수 있는 **브랜딩**(BI, 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 지원

3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구축

○ (**공간관리**) 핵심보전·완충·지속가능이용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

* 해양보호구역 경계에서 해상 1km는 완충구역, 500m를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설정

○ (**지역기반**) 공원마을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으로 **국제기준 정착**

- (**주민 지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지역 참여 기반 강화**

- (**대표종 관리**) **깃대종·기후지표종 발굴**로 지역 중심의 생태관리

전략 3.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

목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협력적 운영·관리 기반 구축**

◈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민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 : ('25) - 개 → ('30) 8개

◈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 ('25) - 개 → ('30) 4개소

1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관리체계**) 정책-시행-관리 역할 분담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해수부**) 정책지원·법령 정비 등 제도관리 총괄 수행
- (**지자체 등**) 공원조성·운영 및 주민협력 기반 마련, 평가·환류

○ (**협의체 운영**) 중앙-지역 연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협력적 관리·운영**

- (**국가-지역협의체**) 공원 조성 계획 승인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자문단**) 복원·보전·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지원으로 사업 환류

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인력양성**) 해양생태 관광 교육·해설사 육성으로 **전문인력 기반 마련**

- (**역량강화**) 공무원·민간 대상으로 운영·환경·탐방 교육 실시
- (**산학연계**) 민간, NGO, 학교 협력으로 **지역 전문 인재 배출**

○ (**지역연계**) 로컬푸드 판로 지원과 주민주도 상품개발로 **자생력 강화**

- (**생태관광**)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 (**권역관리**) 생태축 기반 특화사업과 연계해 **권역별 협력 추진**

3 관리제도 고도화

○ (**전주기 관리**) 계획·시행·평가·개선의 순환체계로 **관리효과 제고**

- (**평가방법**) **국제 보호지역 기준을 반영**한 평가 체계 마련
- (**평가부문**) 관리기반·계획·과정·결과 등 **다각적 성과 점검**

○ (**제도개선**) 관련 법령 정비로 기본계획·운영관리 체계 확립

- (**운영방식**) 민간위탁·지자체·국가 운영 등에 **운영체계 제도 확립**
- (**국제협력**) 동아시아 해양거버넌스와 연계해 **해양생태계 보전·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지역 발전 실현 모범 사례 공유**

붙임 2 국가해양생태공원(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개념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구역

□ (**개념**)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해양공원**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하고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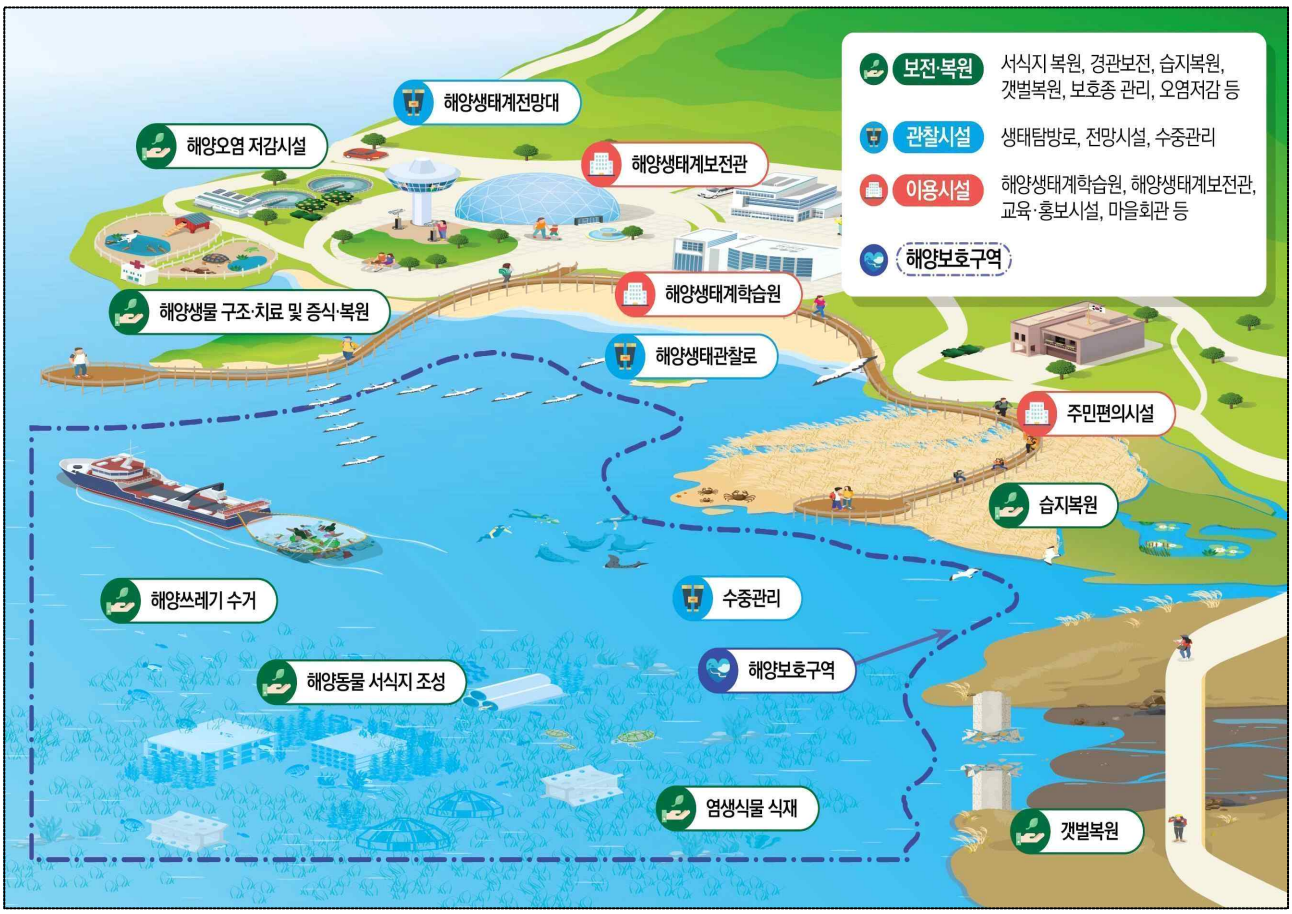
□ (**성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상생 모델 지향

○ (**보전·활용**)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적 관리***를 통해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

* Adaptive management : 관리기법을 수정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관리

○ (**복합공간**)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 이용, 인식 증진, 주민 혜택, 국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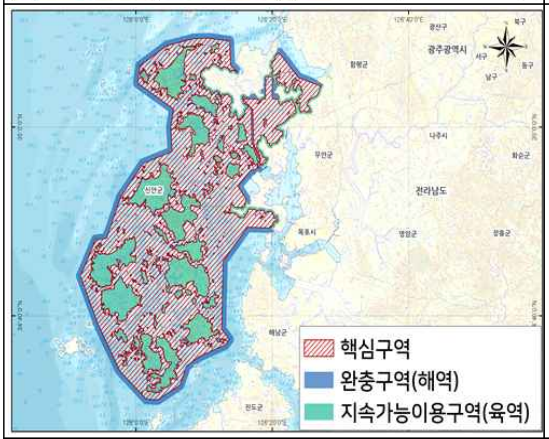
국가해양생태공원(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개념도**



붙임 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 및 예정 구역(안)

붙임 4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도	주요 특징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16.07.28 ■ **법정구역** :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8종 서식 ■ **특징** : 가로림만 해역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47.05㎢** - (핵심구역) 92.04㎢, (완충구역) 13.61㎢ (지속가능이용구역) 41.40㎢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10.01.29(신안), '01.12.28(무안) ■ **법정구역** : 습지보호지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5종 서식 ■ **특징** :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984.86㎢** - (핵심구역) 1,214.2㎢, (완충구역) 200.71㎢ (지속가능이용구역) 569.95㎢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03.12.31(보성), '03.12.31(순천) ■ **법정구역** : 습지보호지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9종 서식 ■ **특징** :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07.94㎢** - (핵심구역) 61.92㎢, (완충구역) 20.96㎢ (지속가능이용구역) 25.06㎢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21.12.31 ■ **법정구역**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12종 서식 ■ **특징** :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 등대'가 위치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39.35㎢** - (핵심구역) 71.77㎢, (완충구역) 50.38㎢ (지속가능이용구역) 17.20㎢